



불법 '비비탄총' 시장 퇴출 초강수

지경부,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협회 합동 점검·단속

“ 정부는 방학기 비비탄총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초강수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



비비탄총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위해 요소가 매우 높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었고 미국이나 일본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탄환의 세기에 따라 연령을 구분하여, 사용연령에 맞지 않게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이런 사고들이 주의사항 등을 촉구하여야 하는 규정이나 연령상 사용제한 규정 등을 위반하는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 지식경제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불량 비비탄총을 근절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KC마크가 없는 불법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표시가 없는 제품, 연령 위반 판매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1차 단속을 실시하고,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2차 단속을 실시한다.

※ 연령 위반 판매에 대한 제보는 한국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www.ksafety.kr)에서 접수

지식경제부는 단속과 병행하여 비비탄 총에 의한 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비비탄 제품의 연결화, 보안경 착용 강화, 사용연령 식별가능 표시, 발사 안전장치 개발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 문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02-509-7275)